



[금융] 신한카드 600만 자영업자 대상 CB사업 진출 04



Life

[산업] 현대로템 폭염도 견디는 열차 견인전동기 개발 05



남산 케이블카 57년 독점 특혜논란... 운영권 회수 여론

안전사고 반복 발생·운영 독점에 운영기간 조정·사고방지 대책 촉구

지난 12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시민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57년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 제1호 관광용 케이블카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한국삭도공업이 사업허가를 받은 후 국유지를 반영구적 사업 기반으로 삼아 이듬해부터 독점 운영해 와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국삭도공업은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이던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 한석진 씨가 1958년 1월 대한제분에서 사직하고 설립했다. 한 씨는 3년간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준비한 끝에 정부 허가를 받았고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남산 케이블카 영업을 시작했다.

1984년 한씨가 사망한 후 아들인 한광수(78)씨가 회사 대표직을 물려받았다. 현재 회사 지분 20%는 한대표가 소



14일 서울 중구 남산케이블카 매표소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운행 중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국내외 관광객 20명을 태운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펜스와 부딪혀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유하고 있고, 한 대표의 아들 2명이 각각 15%를, 공동대표인 이강운 씨가 29%를, 이씨의 아들이 21%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감사는 한광수 대표의 부인 이정학 씨다. 결국 이 회사는 한씨와 이씨 일가가 지분 100%를 반씩 나눠 가지고 있고 감사 역시 가족이 맞고 있어 사실상 가족기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작년 매출 130억여원을 올렸고, 영업이익으로 52억5000만원을 벌었다. 이 회사의 2016년 이전 경영과 회계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남산 케이블카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왔으나 운행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1993년 케이블카 운전자 부주의로 급정거하면서 승객 2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고, 1995년엔 케이블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객 3명이 다쳤다. 2009년에는 강풍이 분다는 이유로 지상 100m 지점에서 케이블카를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승객 12명이 공중에 매달려 긴급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2일 사고 이후 '기기 재정비'를 이유로 케이블카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3년 전에 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가 하면 운영 독점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권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이 서울시장이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남산공

원의 입지적특성을 감안해,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안전사고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해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간을 재조정하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과 협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삭도공업(주)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오면서 남산관리나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고 서울시는 이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삭도공업과 서울시는 봉이김 선달식 사업을 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어르신 간병·형광등 교체... '돌봄SOS센터' 문 연다 "공원에서 여름방학 체험활동 즐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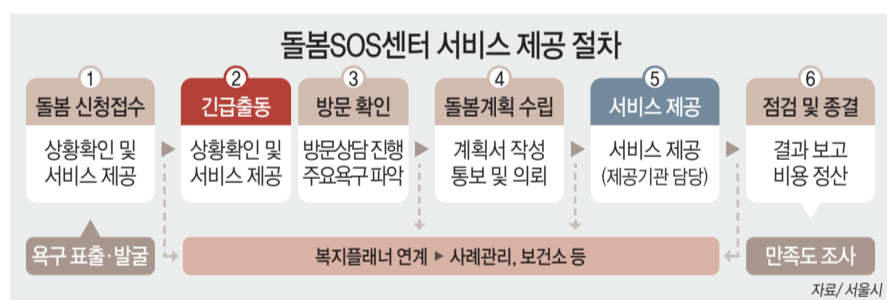
5개 자치구 88개 동서 시범 운영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우선 지원

65세 어르신 단독가구 L씨는 골절 수술 후 신속히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도움을 요청할 서비스가 없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장애인 자녀를 둔 J씨는 갑작스런 통증으로 병원에 단기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나, 주변 지인도 없는 상황에서 몇 일간 자녀를 안심하고 맡아 줄 사람이 급히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하게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나 형광등 교체부터 병원 동행까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18일 문을 연다.

서울시는 18일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88개 동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동주민센터 안에 설치되는 돌봄SOS센터에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인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요양 시설과 복지관, 보건소 등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돌봄SOS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돌봄SOS센터가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총8가지다. ▲요양보호사나 활동 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돌봐주는 일시재가 서비스(연간 최대 60시간) ▲ 시설 입소 지원(연간 최대 14일) ▲ 외출 활동을 돕는 이동지원(연 최대 36시간)▲

가정 내 간단한 수리와 보수를 지원하는 주거 편의(연 최대 4회) ▲ 식사 지원(연 최대 30회) ▲ 안부 확인 등이다.

지원 대상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주로 지원하고,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일반 시민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영유아 맞춤형 '복스타트' 시범 운영

18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독서 프로그램

서울시는 올해부터 18개월 이하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복스타트 독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해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춘 독서 프로그램, 육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육아 커뮤니티와 자원활동가도 지원한다. 서울시가 총예산 14억원을 자치구에 배분하면 자치구가 시의 가이드라

인에 맞춰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사업에는 구립공공도서관 123곳, 공·사립 작은도서관 347곳, 교육청도서관 16곳, 기타 유관기관 529곳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실무협의체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연말에 '서울형 복스타트' 사업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21개 공원에서 117가지 프로그램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서울내 21개 공원에서 117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보라매공원 등 6개 공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총 19종의 다양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은 ▲보라매공원 '어린이조경학교' ▲서울숲 '방학엔 숲으로' ▲길동생태공원의 '방학특집 자연탐사대' ▲월드컵공원 난지야간생태탐사대 등이 운영된다. 길동생태공원, 중랑캠핑숲 등 8개 공원에서는 누에, 반딧불이, 거미, 매미, 꿀벌 등 곤충에 대해 배우고 직접 관찰



길동생태공원. /서울시

하는 자연관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남산공원 호연당(好賢堂)과 낙산공원에서는 역사와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전문가 시민감사관 68명 위촉

법률·회계 등 분야별 도정 감사 나서

대학·연구기관 교수나 노무사, 변호사, 특급감리원,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도정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도 인재개발원에서 법률이나 회계, 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68명을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사·감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사·조사·평가 활동 ▲부패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관 구성은 올해 1월 개정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경기도는 이날 위촉장과 함께 자체 제작한 경기도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표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시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된 분담감사회를 통해 시민감사관 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